

42년째 대일(對日) 무역적자 의 원인이 되고 있는 IT나 철강 부문 부품과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시급히 국산화하지 않는다면 수입선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해 꽂힐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저앉는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기업 최고 경영자(CEO) 상대 정보사이트인 SERI CEO에 올린 영상보고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세 번째 시장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는 한일협정을 체결한 1965년 이후 42년째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오히려 1965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 “IT·철강, 부품 소재 국산화 서둘러라”

삼성경제연 “일본 수입선 中國으로 전환 우려”

對中 무역 흑자구도 축소… 중기 기술육성 시급

대일 수입증가율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과 대일 수입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1990년대 이후 0.86으로 매우 높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일 수출단가 하락과 관련, “대일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은 국제 유가 안정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해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축소됐고, 철강이나 산업용 전자제품은 중국의 저가공세로 수출단가가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수입 역시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원화가치가 엔화에 대해 전년대비 13.3% 상승해 국내에 일본산 자동차, 골프용품, 게임기 등 내구 소비재 수입이 늘었고,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 수출은 선박, 집적회로 반도체,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이 호재를 보였는데, 이를 수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실리콘 웨이퍼, 열연강판, 자동차 부품 등의 대일

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부품·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 목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적극 장려하되 특히 IT와 철강부문의 경우 부품·소재에 특화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철 수석연구원은 “IT, 철강부문의 경우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선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돼 한국 부품·소재부문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며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중(對中) 무역흑자 축소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공기업 ‘낙하산’ 차단 해법은 민영화 추진”

경제전문가들은 공기업사장의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시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매도하면 훌륭한 인재를 놓칠 수 있는 만큼 관련 경력과 자질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공기업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것이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빨리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공기업사장은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 돼야하는데, 행정부나 정치권력을 위한 것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금

융기관은 빨리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민영화가 안되는 것은 금산분리의 상황에서 (인수를 위해) 내국인은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외국자본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하산 여부를 가리는데는 출신보다 경력과 자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덕구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사장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절차의 합리성 없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공무원은) 정정당당히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장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으로 매도해서는 안되어 당시자의 경력과 역량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 일본 등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인사들이 서로 (인사상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자동차 등록수 1600만대 국민 3명당 1대꼴 보유

세계 13위 보유국 부상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600만대 고지를 넘어서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일 현재 1천 600만3천71대를 기록해 지난 97년 7월 1천만대를 넘어서 이후 10년 만에 1천600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97년 1천만대를 넘어서 뒤 99년 10월 1천100만대, 2000년 11월 1천200만대, 2002년 1월 1천300만대, 2003년 1월 1천400만대, 2005년 2월 1천500만대를 각각 기록했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일본·독일·캐나다 등에 이어 세계 13위 자동차 보유국이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차량 증가 대수는 60만6천대로 월평균 4만4천213대, 하루평균 1천 458대가 늘었고, 신규 등록차량은 월평균 10만2천667대, 하루평균 3천385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02



년까지 8% 수준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에는 3% 선에 머물러 국내 자동차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3.06명으로 97년 4.48명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인 미국(3.13명), 일본(1.7명), 독일(1.7명), 이탈리아(1.5명)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일 현재 0.87대를 기록해 지난해 0.86대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합뉴스

## 보험 고객 절반 이상 “노후보장 위해 가입”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생명은 5일부터 2주간 10년 경력을 지닌 자가 보험설계사(FPP) 512명에게 ‘TMF 10년, 보험의 변화상’을 물어본 결과 “1997년 이전에는 질병과 재해보장 등 단순한 보장설계가 보험가입의 주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노후대비로 가입목적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97년 이전의 가입목적은 질병보장이 51.3%로 가장 많았고 활동기재해보장(27.5%), 재테크·저축(20.0%)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대비 목적은 0.9%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대비 목적이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질병보장(28.6%)과 재테크·저축(7.4%), 활동기재해보장(3.7%)은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대한생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10년 전에 비해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객들의 선호상품은 97년에는 질병보장상품이 46.5%, 재해보장보험

이 39.1%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종신·CI(치명적 질병) 보험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활용하는 판촉물도 97년에는 주방·가전제품 등 생활용품(62.9%)이나 껌·사탕(35.1%)이 가장 많았지만 현재는 교양잡지나 공연초대권 등 문화상품(60.3%)과 상품권(20.7%)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계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는 두터운 인맥(59.5%)이 가장 중요했지만 최근 과정상품은 질병보장(57.5%)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연합뉴스

## 교복값·학원비 등 담합 여부

### 공정위, 교육시장 전방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방송(EBS)의 수능교재 가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분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최근에는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예의 주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설 학원들의 학원비나 학습 참고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EBS의 수능교재 가격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이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를 거쳐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EBS의 교재 가격이 다른 출판사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EBS의 수능교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아직 조치결과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집값 하락 가격·中企 부실 확대”

### 금감원 경고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07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 약화, 중소기업 부실화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인기 지역의 잠재적 주택 수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 자본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안정 국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각종 부동산 대책의 시치를 둔 과정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대되고 신규 차입 여력을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또 가계의 순자산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기업의 부실이 커지는 것은 물론 미분양 주택 증가와 신규 주택 건설의 감소로 건설업 경기가 위축되고 지난해 금증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를 웃돌면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말 46.0%에서 작년 9월 말 46.8%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6.3%에서 151.3%로 증가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 “휴대전화 부품폰 도용 심각”

### 단속 미미… 최근 4년간 229건 불과

고장난 휴대전화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할 부품폰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개인간에 음성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보통신부의 단속은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열린우리당 유효희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부품폰 도용과 관련해 정통부는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의 관련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며 단속실적도 2003년 14건, 2004년 43건, 2005년 81건, 2006년 91건 등 최근 4년간 229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단돈 4만원이면 메신저를 통해 복제프로그램 구입이 가능하고 복제를 넘어 도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실상파악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르·메이에르’ 종로센터 회원권 분양

르·메이에르 스포츠가 문화·비즈니스의 중심지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 위치한 종로센터 회원권을 분양한다.

종로센터는 3천여평의 실내공간에 체력단련장과 국제 규격의 수영장, 실내골프장, 스케이팅장 외에 기존 스포츠센터에서는 보기 힘든 실내 농구코트와 탁구장 등 다목적 이벤트장을 갖추고 있다.

또 특급 호텔급 스파와 사우나, 테라피 마사지실, 정통 레스토랑, 최고급 라운지, 비즈니스센터 등도 준비해 운동과 휴식, 비즈니스를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개인회원권은 3천만원, 부부회원권은 4천만원이다. 문의 (02)720-6363.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